

# 머레이 라스바드의 자유의 철학

Murray Rothbard's Philosophy of Freedom

David Gordon\*

번역: 김경훈 연구원 (미세스 코리아)

1 자기소유권과 노예주인으로서의 국가 . . . . .	2
2 사유재산의 정당성 . . . . .	5
3 정치철학 대 윤리학 . . . . .	7
4 윤리는 필수적인가? . . . . .	8

---

\*미세스 연구소의 선임연구원이다. UCLA에서 정신사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마르크스의 부활: 분석적 마르크스주의의 착취·자유·정의 개념》, 《오스트리아학파의 철학적 기원》, 《경제적 추론 입문》, 《마르크스 비판》 등을 저술했다. 《라스바드의 본질: 분리, 국가, 자유》의 편저자이며, 《H.B. 액튼의 시장의 도덕 및 에세이 모음집》의 공동편저자이다. “미세스 리뷰”의 편집자이며, “분기별 국제 철학 저널”, “리버테리언 연구 저널”, “오스트리아학파 경제학 분기별 저널” 등 다양한 학술지에 투고한 바 있다.

## 자기소유권과 노예주인으로서의 국가

머레이 라스바드의 정치철학은 단순한 통찰력에 기초해있다. 바로 노예제가 잘못되었다는 인식이다. 이 명백한 진실에 감히 도전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하지만 이 진실의 의미가 얼마나 멀리까지 도달하는지 알고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 모든 정치철학자 중에서 라스바드가 유일하게 보유한 장점은, 노예제를 거부하는 것이 곧 정부의 가장 사소한 간섭에도 제약 받지 않는 자유방임 자본주의로 이어짐을 보여주었다는 점에 있다.

노예제를 거부하는 것은 곧 각자가 자신의 몸을 소유한다고 말하는 것이다. 노예제도가 부도덕한 이유는 노예주인들이 그들의 지배하에 있는 노예들의 몸을 통제할 권리가 있기 때문이다. 주인은 노예에게 무엇을 해야 하는지 지시하고, 노예가 복종을 거부한다면 말을 들을 때까지 강제할 수 있다.

얼핏 보기에, 이러한 노예제의 특징이 현대 사회와는 거의 관련이 없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다. 1865년 미국의 제13차 헌법 개정안은 노예제도를 폐지했다. 확실히 오늘날에 노예제도가 잘못되었다고 반복하여 말하는 것은, 우리에게 실질적인 중요성을 주지 못한다.

하지만 그러한 결론은 너무 성급할지도 모른다. 노예제의 본질이 타인을 위한 강제노역이라면, 오늘날에도 노예제는 매우 현실적으로 존재한다. 정부가 당신이 번 돈의 일부를 세금으로 가져갈 때, 그것은 사실상 당신이 국가를 위해 일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노예는 자기가 생산하는 것을 소유하지 못하고 주인에게 넘겨야만 한다. 마찬가지로, 납세자는 자신의 몫의 일부를 정부를 위해 포기해야만 한다. 누군가는 일하는 것을 거부함으로써 세금을 면할 수 있다고 반대할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그것은 현실적인 대안이 되지 못한다. 어떤 식량도 공급받지 못하는 대가로 노예들이 일하기를 거부할 수 있는 노예제도가, 보통의 노예제도 보다 많은 개선점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리고 소득세가 국가를 노예주인으로 군림시키는 유일한 영역인 것은 결코 아니다. 지금 당장 미국인들은 강제 징용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과거의 미국 정부 역시 군 복무를 직접적으로 강제하는 징병제를 운영하였

고, 그러한 법은 언제든지 다시 제정될 수 있다. 강제 군 복무를 하는 사람은, 비록 그러한 복무를 하는 것이 그들의 삶을 끝장낼 수 있을지라도, 당연히 명령에 따라야만 한다.

하지만, 다시 한 번 누군가는 이러한 결론이 너무 성급하다고 반론을 내놓을 수 있다. 소득세나 징병제와 같은 조치는, 아무리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더라도 결국 민주적으로 선출된 입법부에 의해 제정되었다. 어떻게 민주주의를, 노예주인이 원하는 무엇이든 다른 사람에게 강제할 수 있는 제도와 비교할 수 있다는 말 인가? 민주주의 제도에서 개인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할 수 없을 수도 있지만, 대다수의 사람이 규칙을 선택한다.

라스바드는 이러한 상황에서도 노예제의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민주주의에서는 대다수의 사람이 노예주인 역할을 할 뿐이다. 개인이 자신의 몸을 완전히 통제할 수 없는 한, 그는 그만큼 노예다. 그가 그의 동료 노예들과 함께 무엇을 할 것인가 결정하는 데 있어서 한 몫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그가 자유롭지 못하다는 점을 해소하지는 못한다. 라스바드의 견해에 따르면, 민주주의는 각자가 다른 모든 사람의 몫을 소유하는 제도이며, 단지 노예제도의 변형일 뿐이다. 우리는 선택을 피할 수 없다. 우리는 반드시 자기소유권 혹은 노예제 중 하나를 더 선호해야만 한다.

많은 책과 논설문에서 라스바드는 자기소유권에 대한 방어를 완전히 논리적인 결론에 이르기까지 수행했다. 약간의 논쟁의 여지는 있더라도 말이다. 만약 당신이 자신의 노동을 소유한다면, 당신은 국가에 대한 지지 의사에 반하여 강제당할 수 없다. 설령 국가가 자신의 활동을 오로지 권리 보호에만 제한하는 경우에도, 그것이 세금을 통해 자원을 갈취함으로써 이루어지기 때문에 권리를 침해한다. 게다가, 자유사회의 사람들은 그들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경쟁적인 보호기관을 설립할 자유가 있다. 그들의 보호가 독점 기관에 국한될 필요는 없다.

지금까지 자기소유권의 원칙은 상식적인 명백한 진리로 제시되어 왔지만, 라스바드는 이 사안에서 무언가 문제를 남겨두는 것이 만족스럽지 않았다. 자기소유권을 논증함에, 라스바드는 한가지 명백한 사실에 크게 의존한다. 모든 사람은 현실 속에서 자신의 의지를 통제한다는 것이다. 만약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복종한다면, 나는 항상 그가 원하는 대로 결정을 내려야 한다. 그리고 내가 내 길을 스스로 개척하여 그가 폭력으로 위협한다고 해도, 상황은 변하지 않는다. 나는 그 위협에 어떻게 대처할지를 결정해야만 한다.

하지만, 비록 라스바드가 그러한 의지를 떨리할 수 없다고 말한 점에 옳다 하더라도, 어떻게 그러한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는 말인가? 의지가 소외될 수 없다는 사실에서, 도대체 어떻게 각자가 자기소유자로 인정받아야 한다는 윤리적 판단이 유도되는 것인가? 라스바드는 여기서 ‘사실(is)’에서 ‘당위(ought)’를 도출하는 실수를 저지르는 것인가?

그러나 라스바드는 이러한 가상의 반대자에 분명히 항의할 것이다. 그는 정말로 ‘사실’로부터 ‘당위’를 이끌어내지만, 그럼에도 그는 그가 어떠한 잘못도 범하지 않았다고 항변할 것이다. 그는 윤리적 원칙이 곧 인간의 본성에서 나온다고 주장한다.

윤리에 대한 이러한 주장은 현대 철학의 많은 의견과 충돌한다. 라스바드는 그와 자주 대립하는 정치철학자 레오 스트라우스(Leo Strauss)가 제기한 설득력 있는 주장을 받아들인다. 스트라우스는 데이비드 흄(David Hume)과 그 후계자들이 개발한 사실-가치 이분법(fact-value dichotomy)이 하나의 인위적 구별이라고 주장하는 일상 언어(ordinary language)에 호소한다. 예컨대, 당신이 영화를 기다리는 동안 누군가 새치기를 했다고 가정하자. 그는 무례하게 행동하지 않았는가? 그가 무례했다는 판단은 주관적 의사결정의 문제가 아니라 객관적 기준에 의해 좌우되었다. 그러면서도, 확실히 ‘무례함’은 가치판단이다. 그렇다면 사실-가치 이분법 주장은 어떻게 된 것인가? 라스바드와 스트라우스가 선호하는 견해에 따르면, 가치판단은 사실에 입각한 것이다. 그렇다면, 아마 훨씬 더 논란이 되는 사안이긴 하지만, 만약 인간이 번영하기 위해 특정한 것을 필요로 한다면, 그것은 사실에 입각한 진술인 동시에 가치판단인가? 어찌되었건, 라스바드는 그렇게 주장했다. (나는 이 글에서 라스바드 주장의 개요만을 제공하고자 하며, 그것에 대한 완전한 변호는 하지 않을 것이다.)

라스바드의 입장은 아마 현대 분석철학자들 중에서는 매우 소수에 해당하지만, 몇몇 선도적인 학자들이 여전히 지지한다. 영국의 영향력있는 철학

자 필리파 풋(Philippa Foot)은 그녀의 《자연적 선(Natural Goodness, Oxford University Press, 2001)》에서 라스바드와 상당히 유사한 관점을 옹호한다. 그리고 심지어, 라스바드의 논증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계속 사실과 가치 사이의 무수한 격차가 구별된다고 믿는 경우에도, 자기소유권은 노예제를 거부하는 모든 사람에게 유효한 법칙으로 남아 있다.

## 사유재산의 정당성

일단 자기소유권을 받아들이면, 사유재산의 정당성이 곧 뒤따른다. 사람들은 모두 노동을 한다. 그렇다면 그는 자신의 노동에서 생산한 것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 이것을 부인한다면 곧 노예제를 수긍하는 것이다. 그러한 주장은 다른 사람이 당신의 노동을 통제할 권리가 있다고 말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시 한번, 라스바드에 대한 반론을 생각해볼 수 있다. 당신은 당신의 노동을 소유할 수 있지만, 그것이 재산을 정당화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사람들은 결국 그들이 전용하기를 원하는 토지를 만들지 않았다. 그러나 이 점은 라스바드에게 오직 약간의 문제만을 줄 뿐이다. 토지는 원래 소유자가 없는 상황에서 시작된다. 토지가 세상에 등장할 때 부터 구획이 나뉘어져 소유자의 이름이 붙어있는 것은 아니었다. 라스바드는 모든 사람이 모든 땅을 집합적으로 소유하고 있다는 조지주의(Georgism) 주장을 단호히 거부한다. 라스바드가 그의 위대한 걸작 《인간, 경제, 국가》에서 기술한 몇 가지 비판에 대해 살펴 보자:

어떤 비판자들, 특히 헨리 조지를 따르는 사람들은 한 인간과 그의 양수인은 그 자신의 노동생산물 또는 그것과 교환하는 어떤 것에 대한 권리가 있는 반면에 최초의 자연이 준 요소, '자연의 선물'에 대한 권리는 없다고 주장한다. 한 인간이 이 선물을 전유하는 것은 모든 인간이 동등하게 이용할 가치가 있는 공동의 유산을 침입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것은 자기모순적 주장이다. 어떤 인간도 최초의 자연이 준 요소들의 협력 없이는 서 있는 공간과 같은 것마저도 생산할 수 없다. ... 그러므로 토지나 자연이 준 다른 요소들에 대한

재산을 인간에게 부정하면 그는 노동의 과실인 재산을 얻을 수 없다.<sup>1)</sup>

라스바드의 관점에서, 우리는 소유가 없는 토지에 노동을 섞음으로써, 혹은 선물이나 교환을 통해서 그러한 재산을 취득할 수 있다. 말 할 필요도 없이 이러한 견해는 존 로크(John Locke)에게서 온 것이다. 라스바드는 로크의 초기 취득 원리(principle of initial acquisition)를 전적으로 수용한다. 그가 설정한 몇 가지 자격요건을 제외하고 말이다.

라스바드는 자기 견해에 반대할 수 있는 가능성을 몇 가지 예상하며 훌륭한 논증적 독창성을 보여준다. 이것들 중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로크주의가 노동을 섞음을 통해 재산을 취득할 수 있다고 말한다면, 이것은 최초의 소유자에게만 유리한 불공평한 상황을 초래한다는 지적이다. 만약 난파선의 선원들이 무인도를 향해 헤엄치는 상황을 상상해보자. 그 섬에 제일 먼저 도착한 사람이 그 모든 것을 얻는 것일까? 그렇다면, 그는 그의 동료들이 자신을 위해 일하는데 동의하지 않는 한, 그의 동료들이 섬에 상륙하는 것을 거부할 수 있는가?

《자유의 윤리》에서, 라스바드는 이 문제를 쉽게 해결한다:

큰 섬에 착륙한 크루소가 어찌면 바람에 대고 전체 섬이 그의 '소유'라고 나팔을 당당하게 불어댈지 모른다. 그러나 그는 오로지 그가 정착하고 사용할 수 있게 변형시킨 부분만을 소유하는 것은 자연적 사실이다. ... 단 하나의 조건은 그 토지가 한번은 사용되어서 그 토지에 그의 노동을 혼합한, 그래서 그의 개인적 에너지의 도장을 찍은 사람의 재산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sup>2)</sup>

(이 책은 《권력과 시장》과 함께 정치철학에 대한 라스바드의 주요한 공헌이다.)

이제 라스바드에 대한 또 다른 반박을 상상해볼 수 있다. 라스바드가 조지주의자들의 주장, 즉 라스바드의 체계에서 최초의 토지 소유자가 다른 모든 사람의 몸값을 요구할 수 있다는 반론을 성공적으로 파쇄했다고 가정해보자. 하지만, 라스바드의 체계는 아무리 논리적이라도 현실적인 타당성이 없는 것 아닌가? 오늘날 대다수의 재산소유권은, 로크주의에서 말하는 최초의

1) 원서 171 페이지, 번역본 217-218 페이지

2) 원서 64 페이지, 번역본 78-79 페이지

소유자로부터의 명확한 이전에 의해 생겨나지 않았다. 반대로, 우리는 많은 재산소유권이 폭력적인 몰수행위에 근거하고 있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다. 라스바드의 체계를 실현하려는 시도는 재산에 대한 상반된 소유권 주장을 즉각적으로 야기하지 않는가?

어느 때처럼, 라스바드는 자신에 대한 가능한 반대를 스스로 추론해왔다. 라스바드는 입증책임이 재산소유권을 제기하는 사람에게 있다고 대답한다. 만약 그가 그의 이의를 입증할 수 없다면, 지금의 소유자가 그 재산을 합법적으로 소유한다. 재산소유권이 최초의 합법적 전용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없는 상황에서, 최초의 소유주와 그의 후손에 대한 추측은 쓸모가 없다.

하지만, 만약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그의 주장을 정당화할 수 있다면? 이 경우 라스바드는 전적으로 자신의 체계가 시사하는 바를 따를 것이다. 라틴아메리카와 그 밖의 다른 지역에서는 지주의 수가 매우 감소한 상황이 도래할 것이다. 《자유의 윤리》에서 쓰기를:

진정한 자유시장, 정의와 재산권에 헌신하는 진정한 리버테리언 사회는 재산에 대한 정의롭지 못한 봉건제적 청구권을 종식시킬 때 비로소 확립될 수 있다. 그러나 재산권에 대한 아무런 윤리 이론에 기초하지 않는 공리주의 경제학자들은 오직 우연하게도 현재 상태는 무엇이라도 옹호하는 것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sup>3)</sup>

## 정치철학 대 윤리학

라스바드의 책은 어떤 의미에서는 잘못 명명되었다. 전체적으로 볼 때, 라스바드는 정치철학과 윤리학을 뚜렷이 구분하며, 그의 저서는 정치철학 주제만을 다루고 있다. 예컨대, 라스바드가 비침해성의 공리(non-aggression axiom), 즉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자발적인 교류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는 원칙으로부터 추론할 때, 그의 결론은 그 전제와 마찬가지로 정치철학의 일부분이다. 라스바드는 모든 자발적인 교류가 도덕적으로 바람직하다는 윤리적 주장을 하려는 것이 아니다.

---

3) 원서 70 페이지, 번역본 85 페이지

만약 정치적 도덕성에 대한 라스바드의 견해가 옳다면, 부도덕한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 곧 부도덕하다고 여겨질 수 있다. 이러한 역설은 도덕을 훼손하지 않으며, 오히려, 도덕의 방어를 위한 중요한 수단이다. 역사의 어느 시점을 흘깃 보기만 해도, 도덕을 가장 심하게 어기는 주체가, 바로 니체가 말하듯 국가라는 점(that coldest of all cold monsters, the State.)을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다. 라스바드는 도덕의 집행에 있어 정치의 역할을 엄격하게 배제하는데, 이런 입장은 도덕적인 관점에서 매우 환영받을 만 하다.

## 윤리는 필수적인가?

《자유의 윤리》의 상당 부분은 루트비히 폰 미제스(Ludwig von Mises), 프리드리히 하이에크(F.A. Hayek), 이사야 벌린(Isaiah Berlin) 등 다른 고전적 자유주의자에 대한 비판에 힘을 쏟고 있다. 특히 로버트 노직(Robert Nozick)에 관련된 논의는 매우 주목할 만하다.

상술한 바와 같이, 라스바드는 자유와 사유재산에 근거한 자유사회를 정당화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 그러나 이런 치밀한 노력이 그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필수적인가? 라스바드의 위대한 스승인 미제스에 따르면, 그렇지 않다. 미제스가 말하길, 우리는 윤리의 본질에 대해 어떤 논쟁적인 가정에도 의지하지 않고 자유시장을 옹호할 수 있다. 최저임금법과 같은 간섭주의 조치가 그것의 지지자들이 추구하는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은 어떤 가치판단과 상관없이 증명가능한 사안이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그러한 조치에 반대하는 가치중립적 방어책을 보유한 것이며, 자유시장의 정당성이 입증된다. 이것 이상으로 필요한 것이 있는가?

라스바드의 생각은 미제스와 달랐다. 라스바드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간섭주의 조치는 많은 사람을 희생시키긴 하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도움이 된다. 예컨대, 노동조합은 조합원들의 임금을 올리지만, 노조 밖의 다른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희생시킬 수 있다. 왜 이런 결과를 노조원들의 입장에서 불만족스럽다고 생각해야 하는가? 미제스의 주장과 반대로, 간섭주의 조치들이 항상 그것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목표 달성에 실패하는 것은 아니다. 시장에



대한 가치중립적 방어는 그 자체로 세워질 수 없다.

미제스의 논문 ‘인간행동의 과학에서 인식론적 상대주의(Epistemological Relativism in the Sciences of Human Action)’에 대한 출판되지 않은 1960년대 논평에서, 라스바드는 미제스와 자신의 차이점을 처음으로 밝혔다. 라스바드는 미제스의 대한 그의 본질적인 비판을 강력하게 피력했다:

하지만 미제스는 무엇이 국가주의자들에게 동기를 부여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예컨대, 가격을 통제하는 사람은 그저 권력을 원하며, 가격통제가 물자의 부족을 야기하는 것에 전혀 신경쓰지 않는다고 가정해보자. ... 혹은 어떤 허무주의자가 모든 사람을 혐오하며, 가격통제를 통해 물자를 부족하게 만들고 싶다고 가정할 수도 있다. 부자들의 재산을 몰수하려는 사람이 엄청나게 높은 시간선호를 가지고 있다는 가정도 가능하다. 그런 경우 20년 안에 경제가 파탄이 날지 아닐지는 전혀 고려대상이 아니다. 그러면 미제스는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그러나 라스바드가 미제스의 견해, 즉 (논쟁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윤리적 가정에 의존하지 않고 자유시장을 옹호하려는 입장과 완전히 거리를 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라스바드는 그것을 확장했다. 《권력과 시장》에서, 라스바드는 시장에 대한 어떤 종류의 간섭은 논리적으로 불가능한 목표를 상정하기 때문에 거부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제안된 윤리적 이상을 실현할 수 없는 주장은 합리적으로 거부될 수 있다. 이 점을 받아들이는 것에 특정한 윤리적 관점을 고수할 필요가 없으며, 단지 이성적 요구일 뿐이다. 그리고 라스바드가 《인간, 경제, 국가》에서 썼듯이, **“만약 윤리적 목표가 자기모순적이며, 개념적으로 실현 불가능하다고 여겨진다면, 그 목표는 분명 불합리적인 것이며 모두에게서 버림받아야 한다.”**

불가능한 목표 중 하나는 소득의 평등이다. 《권력과 시장》에서 말하듯,

소득은 결코 평등할 수 없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소득이란 실질적인 것이지, 화폐적 맥락에서 고려되는 것이 아니다. 실질적인 소득에 있어 진정한 평등이란 있을 수 없다. ... 모든 개인이 반드시 다른 공간에 위치해 있다는 점 때문에, 모든 개인의 실질적 소득은 재화마다 다를 것이고 또 사람마다 다를 것이다. 서로 다른 유형의 재화를 결부지어 비교할 방법은 없으며, 어느 정도의 소득을 ‘소득 수준’으로 측정할 방법도 없기 때문에, 소위 ‘균등한’ 소득 수준에 도달하려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말할 수 있다.

평등한 기회 역시 마찬가지이다.

그렇지만, 이것 역시 이전의 개념처럼 무의미하다. 어떻게 맨해튼을 거니거나 갠지스강을 헤엄치는 데 있어 뉴욕커의 기회와 인도인의 기회가 '평등화'될 수 있을까? 결코 피할 수 없는 인간의 위치적 다양성이, 기회를 평등화할 가능성을 효과적으로 무력화한다.

라스바드의 윤리체계는, 내가 이 글에서 간단히 언급할 수 있는 것 보다 훨씬 더 포괄적이다. 그것은 자유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 뿐만 아니라, 정치 철학에 관심있는 모든 사람에게 관심을 받을 만 하다.